

日本歴史教科書の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연 민 수

- | | |
|-------------------|---------------------|
| I. 서언 | IV. 日本古代史 서술체계와 문제점 |
| II. 渡來人 서술과 民族問題 | V. 결어 |
| III. 天皇관련 서술과 天皇像 | |

I. 서언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 민족문제의 정점에는 이른바 歸化人, 渡來人이라 불리우는 한반도 등 해외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도래는 장기적, 지속적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중앙과 지방 등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들 중에는 일본 고대왕권의 새로운 국가건설에의 중추세력으로 참여하여 도래인 역사의 획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래인에 대한 일본 고문헌의 내용은 천황제 율령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당히 굴절되어 있다. 일본고대 사료를 보는 연구자들의 인식과 평가도 시대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간다. 일본근대의 한국침략기에는 日鮮同祖論과 같은 한국지배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논리로서 이용되었고, 戰後에는 騎馬民族說과 같은 일본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가설의 도구가 되거나, 역으로 일본열도의 한반도계 소국을 증명하는 이른바 分國論이라는 역발상을 낳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본측 연구 중에는 도래인을 천황과 일본조정에 봉사하는 예속민으로서의 자리매김하여, 歸化人史觀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래인은 누구인가라는 민족문제를 포함해서 日本古代史上에서 도래인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은 일본고대 민족사 및 왕권사의 이해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天황과 그 씨족의 문제는 일본고대사의 설명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8세기 천황제 율령국가의 전신인 大和政權의 형성, 발전사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 그 자체를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어 있다. 천황통치의 유구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日本書紀》에 의하면 천황과 그 일족은 천손강림의 건국신화를 갖고 있고, 건국의 시대로부터 그 일족이 一系의 혈통으로 일본을 지배해 왔다고 한다. 천황이 절대주권을 갖던 시대에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고대사의 논리였지만, 패전 이후 황국사관에 대한 비판과 문헌에 대한 사료비판,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의해 역사인식과 서술체계에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최근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민족과 천황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역사와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내세우기 위해 천황의 존재는 불가결하고, 일본민족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 현행 검인정제도하에서의 우익교과서의 존재는 일본정부의 현재적 관심사와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문제로 도래인과 천황 관련 서술에서 논점은 무엇이고 내용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본고대사 서술체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渡來人 서술과 民族問題

1. 도래인·귀화인과 민족문제

동아시아대륙의 동쪽 해역에 위치한 일본열도에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와 중국대륙 등 동아시아세계의 정치적 변동기이다. 이 시기에 수전 농법에 의한 농경문화가 전파되면서 인구증가를 촉진시키고 수장층의 등장과 소국의 형성, 전쟁과 외교를 통한 생존의 법칙을 터득하면서 고대국가 형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야요이시대 이후 7세기 후반까지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른바 도래인이라고 하는 한반도인을 주류로 하는 인간군은 고대일본 민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 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된다.

도래인에 대한 연구는 도래의 시기와 배경, 도래인의 인구와 분포, 도래인의 일본 고

대왕권 내에서의 역할 등 문화사적인 의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져 왔다. 이것은 도래인 연구의 기초이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다. 나아가 도래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다. 일본고대 문헌에는 이들을 귀화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제법적인 귀화의 개념은 이민족,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현지 국민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고대의 관념체계 속에서는 근대법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존재한다. 고대의 귀화의 개념은 중화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천자의 王化가 미치지 않은 주변의 夷狄들이 왕화를 흠모하여 스스로 귀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개지역의 종족들이 문명세계에 들어와 교화를 받고 융화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화인을 받아들인 지역은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¹⁾

《日本書紀》 등 고대일본의 문헌에는 한반도 등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에 대해 일본 천황의 皇化가 미치는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의 歸化, 投化, 化來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屬地法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일본고대에 있어 국경과 민족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屬人法에 따라 귀화의 조건은 化內인가 化外인가에 결정된다. 고대일본의 지배층이 인식한 귀화인은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이고, 일부는 낙랑군이나 대방군에서 韓諸國으로 흘러들어간 중국계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의 중앙정권이 미개종족으로 멸시하던 일본 동북방의 蝦夷나 구주남단의 隼人は 夷狄으로 취급되어 귀화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고대왕권이 본 귀화인이란 문화적 사고가 깔려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의식의 소산으로 생각된다.²⁾

도래인을 민족문제로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근대 한반도 침략기에 나타난 日鮮同祖論, 양민족 同源·同種論이다. 이 학설은 일본이 한국을 동화시키기 위한 학문적 연구로 한일병합이 시작되는 1910년경에 본격화된다. 대표적인 논자인 喜田貞吉은 한국은

1) 일본의 문헌에서 歸化란 용어가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는 《일본서기》 天武10년(681) 8월조이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10년간의 조세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율령의 조문에는 귀화인의 도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들이 정주지가 정해지고 호적에 등재되면(<戶令> 沒落外蕃條), 口分田도 지급받는다. 또 化內의 적용을 위해 10년간의 과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賦役令> 沒落外蕃條).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율령국가의 외국인의 일본정착을 위한 법적 조치이다. 율령법에 나타난 법적 행위는 천황의 民이 되기 위한 절차이고 천황의 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王化思想이 반영되어 있다.

2) 歸化人を 渡來人으로 그대로 대체시키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율령국가의 법제적 용어로 귀화인의 사용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귀화의 개념을 둘러싼 諸說의 검토는 中野高行, <歸化人という用語の妥當性>[2008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岩田書院)] 참조.

일본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의 병합은 한국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태고의 상황으로 복귀시킨 것이고, 한국은 실은 빈약한 분가로, 우리나라는 실은 부강한 본가라고도 할 수 있다는 등 극히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조속히 그들을 동화, 융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다년의 분립의 결과 풍속과 습관이 달라지고, 특히 불행한 환경 때문에 다소 다른 심성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제국에 복귀하여 일반 국민으로 동화하여 같은 천황폐하의 충량한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침략과 병합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³⁾ 이외에도 언어학, 고고학, 민족학 등의 견지로부터 양민족 民族同源論을 주장하는 학설들이 한국지배기에 쏟아져 나왔다.

도래인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본 고대국가형성사의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제기한 것은 關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조상이 귀화인을 동화한 것같이 말하지만, 귀화인은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들이 한 일은 일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하여 ‘渡來人=日本人’論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도래인이 수행한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⁴⁾ 關晃의 입론은 이후의 도래인 연구의 획기를 가져왔고, 고대일본 왕권에 예속되어 봉사하는 귀화인으로서의 인식에서 일본 고대국가사상에서 도래인을 올바르게 위치시키려는 논고가 이어졌다.⁵⁾

2. 교과서에 서술된 도래인

그럼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도래인 관련기사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戰後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된 이후 민간업자에 의한 다수의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먼저 1951년판 《中學日本史》(坂本太郎·家永三郎編, 學校圖書株式會社)의 <日本民族>의 항목을 보면, “일본열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5~6천년 전이고, 해외의 어느 지역으로부터 인류가 건너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방아시아계와 남방아시아

3) 喜田貞吉, 1910 《韓國との併合と歴史》(三省堂); 同 1921 <日鮮兩民族同源論> 《民族と歴史》 1-1; 1979 《民族史の研究(喜田貞吉著作集8)》(平凡社) 411~415

4) 關晃, 1956 《歸化人》(至文堂)

5) 上田正昭, 1965 《歸化人》(中公新書); 今井啓一, 1972 《歸化人の研究》 8 (綜藝社); 平野邦雄, 1993 《歸化人と古代國家》(吉川弘文館); 井上滿郎, 1987 《渡來人》(リプロボート); 同, 1995 《日本古代と渡來人》(明石書店); 加藤謙吉, 2001 《吉土と西漢氏》(白水社); 同, 2002 《大和と渡來人》(吉川弘文館); 同, 2009 《秦氏とその民》(白水社);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校倉書房); 同, 2005 《倭國と渡來人》(吉川弘文館)

아계”라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도래인 관련 서술은 “백제에서 금속기, 도기, 직물, 농경지식에 밝은 사람들을 보냈다”거나 “대화 조정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귀화인이 했다”고 하듯이 도래인을 귀화인으로서 일본 고대문화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清水書院(小澤榮一·佐野正則, 《中學日本史》, 1951)에서는 <우리들의 선조>라는 항목에서 “대륙과 남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고, 우리들의 먼 선조다”라고 서술하고, <대륙문화의 수입>에서는 “4세기경 … 조선·중국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귀화하는 사람이 있고, 대륙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등 도래인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戰後 학문적 민주화의 계기로 나온 최초의 교과서로 민족문제 관련 내용도 戰前의 연구와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략한 내용이지만, 일본민족의 기원을 북방아시아, 남방아시아에 두고 있다. 귀화인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 일본고대의 대외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문화사적인 의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이후 민족문제의 기본틀을 형성하면서 상당기간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55년판 東京書籍 (《新しい社會》)의 <日本人의 성립>을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조선인, 만주인, 몽고인, 아이누인, 남방인과 어떠한 관계인가는 불명이다. 일본이 대륙과 분리되어 섬나라가 된 이후 사람들이 살고, 장기간의 생활을 영위하고 해외에서 건너온 사람과의 피가 혼재해 체질도 변하고 공통의 언어와 습관을 만들어 지금의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고 기술한다. 4년 전의 기술에 비해 ‘피의 혼재’, ‘공통의 언어와 습관’ 등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일정한 진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래인 관련 서술에서는 <귀화인>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중국과 조선과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4~5세기에 걸쳐 일본에 건너 온 귀화인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학문가 선진기술을 갖춘 자가 많아 이때부터 일본문화는 급속히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965년판 大阪書店 (時野谷勝 外 《中學歴史2・歴史的分野》)의 <日本民族>에서는, “일본열도가 생기거나서부터 아시아북부와 남부방면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혹은 조선반도와 樺太, 千島, 남방의 섬에서 수차에 걸쳐 도래했다. 이들이 오랜 세월동안 서로 혼혈되어 일본인 조상이 되었다”라고 서술한다. 일본민족 구성분자가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건너와 혼혈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도래인 관련에서는 <대륙문화의 수입>에서 ‘귀화인’에 의한 문화의 전파와 이들의 왜왕권 내에서의 역할에 대

해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나온 모든 교과서에는 도래인 관련 서술은 일정한 틀 속에서 규칙성을 보이며 일본 고대국가형성사의 주요 부분을 점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가면 한반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귀화인에서 도래인으로 변화하는 기술이 증가하게 된다. 1975년판 清水書院(小葉田淳, 《日本の歴史と世界》)에서는 <대륙문화와 도래인>의 항목을 설정해서 “대화조정과 대륙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면, 조선과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이주하게 된다. 이리하여 대륙문화는 활발히 전해졌는데, 이들 도래인은 토기제작, 기직, 철기생산, 마구제작, 건축, 조선 등 각 방면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1977년판 東京書籍(《新訂新しい社會・歴史的分野》)에서도 “5세기경부터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渡來人)”으로 기술하고, “도래인은 한자와 유교서적을 전하고 조정의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사건을 기록”, “이 일에 종사한 것은 도래인과 그 자손”, “조정에서는 도래인을 部民으로 편성”하였다는 등 일본 고대국가사에서의 도래인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귀화인에서 도래인으로의 용어의 변화에는 일찍이 金達壽, 李進熙 등 재일사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69년에 만든 계간잡지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朝鮮文化社)를 통해 일본 열도 내 한국문화의 흔적과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과 그 자손들이 일본사회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정력적으로 보고하였다.⁶⁾ 김달수는 동 잡지 창간호의 좌담회에서 “대화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은 渡來人이라 하고, 시대가 飛鳥에서 奈良로 이행한 이후는 歸化人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 후 한반도로부터의 이주자를 歸化人으로부터 渡來人으로 용어를 바뀌게 하는 등 이른바 歸化人史觀의 극복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 도래인 연구에 일생을 바친 今井啓一도 明治・大正年間の 개설서에 이들의 공적을 칭송하기보다는 이들을 융화하고 동화하는 일본인의 배려와 위대함을 예찬하는데 주력했음을 비판하고, 神國觀的 사관에서 벗어나 일본 上代文化에 기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1984년도 판 永原慶二 著(《中學校社會・歴史的分野》, 學校圖書株式會社)에서는 <활약하는 도래인>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도래인과 그 자손에 의한 생산, 기술, 지식, 불교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고고학, 인류학 등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일본민족의 형성을 한반도 등 주변제국

6) 이후 김달수는 전국 각지의 도래인의 足跡을 조사하여 《日本の中の朝鮮文化》(講談社, 전12권)라는 시리즈를 완결하였다.

7) 今井啓一, 《歸化人研究》(總説編, 綜藝社, 1972, 4~5)

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면서 서술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990년 판 日本書籍(兒玉幸多《中學社會·歷史的分野》)에서는 <일본인의 조상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5개의 루트를 서술하고 있다. 빙하시대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북방루트로 아이누계 일본인과 그 자손이고, 한반도루트로 인종, 언어가 몽골계로 하는 그 자손 그리고 조몬시대의 루트인 동지나해 루트,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본토로 들어오는 동남아시아루트, 남태평양 섬으로 연결되는 남양루트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일본민족루트의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야요이시대 이후의 거센 인구의 파동과 그 주요 루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어 대세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있다. 1993년도 판 大阪書籍(井上滿郎 外, 《中學社會·歷史的分野》)의 <건너온 이주민>을 보면, “일본에서 도작을 시작한 사람들은 발견된 석기나 청동기의 형태로부터 조선반도남부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생각한다. 이들은 세토내해를 거쳐 近畿, 東海, 關東지방으로 또 일본해를 따라 동북지방까지 진출하고 촌락을 형성하였다”라고 하고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여러차례에 걸쳐 한반도 등지로부터 인구의 이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大和정권의 외교와 도래인>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에 대량의 철이 들어오고 또 중국과 조선사람들이 일족을 거느리고 일본에 이주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한다. 도래인은 大和, 河內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 거주”하였다고, 토기, 건축, 금속기공 등의 기술을 전하고 외교문서, 기록작성 등에 종사한 일족들 그리고 한자, 유교, 불교 등이 전래되어 일본문화의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반도계 사람들의 이주와 집단적 거주를 지적한 것은 근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도래인의 실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2000년도 이후의 교과서에서도 <도래한 사람들과 문화>(日本書籍, 大阪書籍, 2002년. 2006년도 판), <대륙문화를 전한 도래인>(東京書籍, 2002년, 2006년 판)에서도 도래인의 이주 배경과 지역, 문화전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우익교과서로 논란의 선상에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扶桑社 판 및 自由社 판 교과서를 보면, <귀화인과 불교의 전래>에서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대화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한다. 역사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귀화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전래의 요인을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인 관여의 결과라고 하여 1950~60대의 교과서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戰後 교과서에 나타난 도래인에 대한 서술은 일본 고대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는 문화사적 의의와 역할이 중심이고,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에 대한 관심은 교과서에서는 벗어나 있다.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귀화인이라고 하여 戰前의 황국사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후부터는 ‘새역모’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도래인으로 표기하고 있어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도래인의 이주의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동란이라는 정치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1950~60년대에는 대화정권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관여에 의해 일본열도로 귀화인이 발생했다는 등의 한반도지배사관에 근거해서 서술하고 있다. 도래인의 이주의 시기도 농경문화가 시작되는 야요이시대와 5세기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도래인의 과동이 절정기를 맞이하는 7세기 후반의 백제, 고구려 멸망기의 도래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日本古代史上에서의 도래인의 위치

고대일본 민족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도래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平安시대 편찬된 《新撰姓氏錄》에 의하면 王京과 畿内の 山城, 大和, 攝津, 河内, 和泉 등 5개 지역의 1182씨족 중 324씨족이 도래계이다. 일찍이 栗田寛이 고대 문헌에 보이는 전 씨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385씨족 중에서 710씨족이 도래계라고 한다.⁸⁾ 사료상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도래계 씨족은 대체로 3분의 1 이상이 된다. 특히 기내지역의 거주자들은 중앙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자격을 부여받은 특권층이다. 이들은 조정에 출사하여 관인으로서 등용된 인물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5세기대 이후 집단이주의 전승을 갖는 秦氏, 漢氏를 비롯하여 문필과 외교문서의 작성에 종사하는 史姓씨족들은 分枝되어 전국적 분포를 형성한다. 《일본서기》 欽明紀 원년(532)에 秦人の 戶數가 7053호였다는 기록이 있고, 正倉院文書의 九州의 豊前國 호적(702년)에는 3개 촌락의 秦氏의 비율이 9할이 넘는다. 《일본서기》 應神朝 때 弓月君이 120현의 백성을 이끌고 도래했다는 전승과 결부시켜 볼 때 흥미로운 기록이다. 鬼頭宏의 人口學연구에 의하면, 조몬시대 중기의 東日本지역의 인구는 25만 2천명으로 일본열도 총인구의 85%를 차지한 것에 대해 서일본의 7지역의 인구는 불과 9천5백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야요이시대에 들어오면 동서의 균형이 크게 변하여 近畿지역의 인구비율이 2.7%에서 16.9%, 九州지역이 8.3%에서 17.7%로 西日本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

8) 栗田寛, 1970 《氏族考》 《續史籍集覽》 4 (すまや書房) 145~155)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이주에 있다고 한다.⁹⁾ 埴原和郎의 인골의 계측학적 연구에서도 조몬시대 중말기에서 고분시대에 걸쳐 상상 이상으로 대량의 인구유입을 추정하고 있다.¹⁰⁾ 야요이시대 개시기인 기원전 3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1천년간 도래인의 인구는 일본인 전체의 70%에서 90%에 달하고 그 숫자는 1백만 명 이상으로 특히 그 비율은 서일본지역이 높다고 한다.¹¹⁾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유전자의 상당비율은 도래계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천황의 덕화를 흠모하여 건너온 귀화인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역이자 창조적 개척자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8세기 중앙의 왕권이 전국을 지배하는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통치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배계층과 구별되는 계급적 차별성과 혈통적 이질성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율령법에 化内, 化外, 歸化, 夷狄이라는 일본관 중화의 이념과 《신찬성씨록》에 보이는 神別, 皇別, 諸蕃이라는 출신의 구분을 창출해냈다. 고대일본의 율령법과 문헌에 보이는 귀화의 개념은 중국의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다분히 주관적 대외인식의 표출이고 국내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로서 주안점이 있다. 율령법에 명문화된 귀화인에 대한 개념이 성립된 신라에 대한 대항의식이라는 대외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신라를 능가하고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8세기 율령국가의 현실적 과제였다. 신라에 대한 우월의식을 주장하기 위해 법제화된 신라변국관이 필요하였고, 외교의례의 장에서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계 이주민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인 귀화인사관을 만들어 과거의 한반도제국과의 관계를 모두 천황의 王化思想에 용해시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8세기에 성립한 율령법에 의해 법적으로 천황의 民이 된 도래인들은 일본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신찬성씨록》에 보이듯이 9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본적지에 대한 귀속의식은 의연 남아있었다. 도래인은 일본속의 異民族인가, 복합·다원성을 갖는 일본민족의 구성원인가¹²⁾ 등 민족적 아이덴티티문제를 포함해서 도래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鬼頭宏, 2000 《人口から讀む日本の歴史》(講談社學術文庫) 28~30・59~60

10) 埴原和郎, 1995 <彌生人-在來系渡來系(8)> <古墳人以來-渡來系集團の擴散(9)> 《日本人の成り立ち》(人文書院) 참조.

11) 埴原和郎, 1993<日本人集團の形成-二重構造モデル> 《日本人と日本文化の形成》(朝倉書店) 226~269

12) 일본민족의 복합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民族複合國家’로 정의하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保立道久, 2004 <渡來人の王國から民族複合國家へ> 《黃金國家》(青木書店)] 참조.

Ⅲ. 天황관련 서술과 天황像

1. 황국사관과 천황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천황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대의 學制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明治維新 이후이다. 1872년 학제가 공포되면서 근대교육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1889년 大日本帝國憲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教育勅語가 발표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제1조에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에 천황은 신성하고 침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듯이 천황의 일본통치의 대권 및 신성불가침의 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칙어는 유교적 충효사상과 천황제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족국가관으로 이후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칙어의 영향을 받아 小學校教則大綱이 공포되었다. 이는 당시 팽배하던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900년 개정된 소학교령시행규칙 제5조에 “일본역사는 國體의 대요를 알게 하고 아울러 국민다운 지조를 키움을 요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체는 천황의 통치이고 천황통치의 유래와 그 위업을 교육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일본의 국정역사교과서는 1904년부터 1946년까지 모두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7종이다. 이 시기의 역사교과서의 서술상의 특징은 제1기부터 제5기까지는 인물중심의 동일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6기부터는 시대구분과 함께 내용상의 특징으로 신화의 세계가 극히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 제7기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1945년의 패망과 함께 미군정 하에 만들어진 교과서로서 신화의 세계가 탈색되는 등 이전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¹³⁾

제1기(1903) 《小學日本歷史》의 고대사 목차를 보면, 天照大神, 神武天皇, 日本武尊, 神功皇后, 仁德天皇, 物部氏와 蘇我氏, 聖德太子, 天智天皇과 藤原鎌足, 聖武天皇, 和氣清麻呂, 桓武天皇과 坂上田村麻呂, 傳教大師와 弘法大師, 菅原道眞 등이다. 이러한 목차의 배열과 형식은 제2기(1009) 《尋常小學日本歷史》, 제3기(1920) 《尋常小學國史》(上卷), 제4기(1934) 《尋常小學國史》(上卷), 제5기(1940) 《小學國史》(上卷) 까지 귀족 등 한두

13) 1963, 《日本教科書大系 - 近代編》 18~20卷 (歴史1-3) 講談社 참조

명의 인물의 첨삭이 있으나 천황의 존재는 완전히 일치하고 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명치기에는 고고학의 과학적 방법론이 들어와 일본민족의 기원 등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古事記》 《日本書紀》의 神代紀의 역사관과는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들 연구가 교과서에 수용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목차의 주요 인물을 보면, 天照大神, 神武天皇, 神功皇后 등이 배열되어 있다. 이들은 천황과 천황가를 신격화시키고 일본의 국력을 해외로까지 확산시킨 영웅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인물중심의 서술은 청소년들의 심적 발달단계로 보아 받아들이기 쉽고, 감동과 교훈, 교화의 역사교육의 목표로서 가장 적합한 주제 설정이라고 생각한다.¹⁴⁾ 특히 천황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특성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편찬되었다.

제1기(1903)의 서술을 살펴보자. 제1장의 천조대신에 대해 천황폐하의 선조이시고, 그 덕은 매우 높고 마치 태양이 천상에서 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그의 후손인 瓊瓊杵尊에게 이 나라를 내려주시고, 만세에도 변함없이 대일본제국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2장의 신무천황에 대해서는 천조대신의 후손인 신무는 동방을 평정하여 大和지방의 橿原宮에서 처음으로 천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 해는 지금부터 2,560여년 전으로서 이를 일본의 기원 원년으로 한다. 매년 2월 11일은 국민 모두가 이를 경축하는 紀元節이라고 한다. 제1장과 2장의 서술은 일본의 건국신화에 근거한 천상계를 통치하는 皇祖神과 건국의 시조인 초대천황의 이야기이다. 8세기에 만들어진 천황가의 건국신화가 근대의 왕정복고와 더불어 현실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실의 역사로 주입하게 된다. 제3기 이후는 서술의 양도 급증하게 되고 천황통치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제4기에 천조대신은 “이 나라는 우리 자손이 왕이어야만 하는 땅이다. 너 황손이 가서 다스려라. 황위가 성함이, 천지와 함께 끝이 없을 것이다”,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들어서, 천지와 함께 영원히 불변하는 우리 국체의 기초는 실로 이때에 정해진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5기에는 “豊葦原의 천오백년 동안 서기가 내린 나라, 일본은 우리의 자손을 왕으로 삼기에 적합한 땅이다. 부디 황손을 통하여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우리의 황위가 성하기를 천지와 함께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천손족으로서의 혈통을 계승한 만세일계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제4장을 다룬 신공황후의 제1기 서술을 보자.

14) 永原慶二, 2001 《歴史教科書をどうつくるか》 (岩波書店) 40~41

지금의 한국에는 신라, 백제, 고려의 세 나라가 있었다. 이를 일본에서는 삼한이라고 한다. 또 일찍부터 일본에 복속했던 임나라고 하는 소국도 있었다. … 이 때 황후는 … 바다를 건너 신라를 습격하니 신라왕이 놀라 곧 항복하였다. 이로부터 백제와 고구려도 모두 일본에 항복하였다.

이른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담이 여과없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당시의 위정자들에게는 신공황후는 일본의 국력을 해외에 떨친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다.¹⁵⁾ 제2기에서는 “황후는 …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왕은 皇威의 대단함을 보고 크게 놀라 항복하고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해도 반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후 백제·고구려 두나라도 우리나라에 항복하였다”라고 하면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現今 한국이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하에 있는 실황과 서로 비교하여 눈앞의 상태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국이 을사조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한국병합이라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교사들에게 병합의 당위성을 주입하도록 환기시켰던 것이다.¹⁶⁾ 한민족 말살기에 해당하는 제5기, 제6기가 되면 “일본이 훌륭한 나라임을 알고 그 후 반도에서 건너 온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이와같이 국내가 안정되고 皇威가 반도에까지 미쳤던 것은 오로지 신들의 보호와 왕실의 은덕에 의한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현실의 한국지배와 한민족의 말살정책을 위해 內鮮一體와 日鮮同祖論으로 포장된 이론으로 식민지 정책을 추진해 갔던 것이다.¹⁷⁾

2. 패전 이후의 천황 서술과 고분

황국사관의 늪에서 벗어나 천황에 대한 서술이 변화한 것은 패전 이후였다. 1946년 정월에 昭和天皇은 <新日本建設에 관한 詔書>에서 신화와 전설에 의해 성립된 일본국과 천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념을 부정하고 천황 스스로 황국사관의 정신을 뒤엎는 이른바 ‘人間宣言’을 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건국신화, 초기 천황가의 계보 등에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

15) 명치정부는 국권신장을 포함한 문명개화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공황후를 ‘一君萬民’의 체제하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16) 정재정, 1988 《일본의 논리》 (현음사) 143~145

17) 拙稿, 1999 <日本 古代史像의 형성과 教科書 서술> 《歷史教育》 80

한 흐름 중에서 나온 것이 江上波夫의 騎馬民族說로서 그때까지의 神國日本, 萬世一系思想에 의해 고정되어 왔던 일본국가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기원을 둔 기마민족에 의해 일본 고대왕조가 탄생하였다고 한다.¹⁸⁾ 이후 일본고대 初期王朝史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야기시켰다. 水野祐에 의해 시작된 왕조교체론은 神武天皇 이래 일본이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통설을 비판하고, 大化改新(645) 이전에는 혈통을 달리하는 3개의 왕조가 교체되었음을 주장한다.¹⁹⁾ 이후 應神王朝論,²⁰⁾ 三輪王朝로부터 河内王朝로 이동하는 왕조 교체설²¹⁾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다. 일본국가의 기원, 고대왕조사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미쳐 패전 이전의 《古事記》·《日本書紀》신화에 기초한 서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종전의 천황 등 인물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일본역사의 발전과 전개과정을 고고학, 민속학 등의 관련 제 학문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인간활동의 유산인 문화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戰後の 교과서에는 천황을 단일 항목으로 설정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천황에 대해서 대화정권의 권력의 상징물이자 국토통일의 가시적 조영물로서 서술되고 강조된 것이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우는 거대고분이다. 이 고분은 당시의 권력자의 것이고 권력자는 곧 천황이라는 인식에서 거대고분의 존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고대사에서 4~6세기를 고분시대라고 명명할 만큼 이 시대의 특징인 전방후원분은 하나의 고고학적인 유물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무언의 사료로서 간주되고 있다. 일본고대의 고분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明治期로서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표된 1889년경에는 그간 소재불명이었던 13陵을 포함한 모든 천황릉의 위치를 확정하였다.²²⁾ ‘천황은 신성하고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禁足地가 되어 현재에 이르

18) 江上波夫·八幡一郎, 1949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 《民族學雜誌》 13-3 ; 江上波夫, 1967 《騎馬民族國家》(中公新書)

19) 水野祐, 《日本古代王朝史論序說》 [1992 《水野祐著作集1》 (早稻田大學出版部) ; 최초 간행은 1952]

20) 直木孝次郎, 1964 <應神王朝論序說> 《日本古代の氏族と天皇》 (塙書房) ; 井上光貞, 1965 <帝紀からみた葛城氏> 《日本古代國家の研究》 (岩波書店)

21) 上田正昭, 1967 《大和朝廷》 (角川書店)

22) 10세기에 편찬된 《延喜式》 권21, 諸陵寮에는 神武로부터 光孝천황까지 역대천황의 54기 陵을 비롯하여 皇후, 왕족, 공신의 陵墓名 하에 피장자, 소재지, 묘역의 넓이, 陵戶, 戶墓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도시대 말기 尊王思想의 배경하에서 왕릉이 수리와 고증이 행해졌고, 명치신 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소재지와 정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천황릉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天武·持統陵을 제외하고는 불명인 것이 많다.

기까지 학술연구를 위한 발굴조사는 허락되지 않는다.²³⁾

현행본 중학교역사교과서 9종,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 12종을 조사한 결과 實教出版 《日本史B》를 제외하고는(應神천황릉 소개) 예외 없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仁德天皇陵이다. 이 陵에 대해서는 현재 傳仁德天皇陵 혹은 현지 지명을 따서 大仙(大山)古墳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덕천황릉으로 명기하는 교과서가 적지 않았다. 천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7세기 후반대이고 피장자 역시 不明인 점이 많아 인덕천황이라는 구체적 인명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 陵에 대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해설을 보면, “일본최대의 전방후원분으로 폭300m, 길이 487m, 높이 34m로 3층의 호로 되어 있다”(《われわれの中學社會, 歴史的分野》, 일본서적신사), “일본 최대의 고분, 5세기경 大阪 평야에 축조된 거대 전방후원분, 축조에 1일 1천명씩 15년 이상 걸림”(《中學生の社會科・歴史》, 일본문교출판), “5세기에 축조, 전장 487m, 세계최대”(《新編新しい社會・歴史》, 동경서적), “전장 487m, 높이가 35m, 연인원 680만 7천인”(《新中學校歴史》, 清水書院) 등 규모와 노동력 등에서 당대의 최고, 최대의 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대 판 후소샤 교과서에는 秦始皇帝의 묘역과 비교하여 인덕천황릉이 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5세기대의 거대고분의 축조에 대해 “5세기경에는 대화정권의 힘이 구주북부에서 관동에 미치고 그 왕은 대왕이라 부르고 후에 천황의 선조”(《中學生の社會科・歴史》, 일본문교출판)라고 하는 서술로부터 고분을 통해 후대의 천황의 권력과 이미지를 재현시키고 있다.²⁴⁾

고분의 크기와 그 분포의 양상을 통해 당시의 중앙과 지방의 정복과 복속관계를 究明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시도되어왔고, 이러한 연구가 고대사학계의 통설화 되고 있다. 다만 거대고분이畿内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기내의 고분에 비견될 만한 지역고분이 존재한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세습왕권, 독자의 통치조직, 정치적 지배영역, 독자적 천하의식과 지배의 이데올로기, 대외교섭권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오로지 대화정권중심의 설명체계에는 의문이 있다.²⁵⁾ 일본 고대국가형성이 다양한

23) 일본 고고학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는 2005년도에 宮内廳陵部에 대해 陵墓의 공개요망서를 제출하는 등 陵墓조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특집, 2009 『陵墓問題と歴史研究』 『歴史研究』 857, 참조)

24)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扶桑社版(2001, 2005), 2009년도에 검정합격판 自由社版 중학교교과서에서는 고대사 서술에서도 건국신화 등 천황에 대한 서술이 적지 않다. 戰前の 황국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별고(2005 <日本 中學校歴史教科書の 古代史 서술과 歴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 2009 <신편 새로운 歴史教科書の 歴史觀과 향후의 전망> 《역사교육논집》 43)에서 논한 바 있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요인과 구조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고분이라는 단선적인 매체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6세기의 기내의 고분을 후대의 천황의 이미지로 연상시키는 수법에서 벗어나 다원성이 존재했던 왕권과 수장권의 실태를 추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V. 日本古代史 서술체계와 문제점

1. 고대사서술의 주요 특징

戰後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체계의 커다란 특징은 고고학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반영이다. 戰前에는 국정교과서는 물론이고 일반 개설서에서조차 고고학적 연구성과의 반영이 어려웠다. 이것은 건국신화가 사실로 서술되던 시기에 신화의 시대와 실제의 고고학의 연대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황국사관에 대한 학문적 메시가 가해진 민주화된 풍토에서 戰前의 고고학 연구성과는 점차 교과서에 반영되고 이후의 활발한 발굴조사에 의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체계화된 객관적 서술이 나타나게 된다. 戰後 검인정교과서 체제 하에서 서술의 형식과 방법 등 기본 체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과서에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첫째, 원시사회를 설정하여 일본민족의 기원 및 조몬사회의 일본열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로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반영된 서술이다.

둘째, 일본열도에서 정치권력이 발생하는 야요이시대의 농경문화와 소국의 형성과정을 중국문헌의 왜인전과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고고학적 유물의 양상, 분포 등을 통해 그 실태를 추구한다.

셋째, 대화정권의 출현과 발전이다. 7세기말 천황제 율령국가를 수립한 일본국의 전신으로서의 대화정권의 성장과 발전과정은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를 그대로 말해준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주요 서술로서는 영토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屯倉制,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部民制, 왕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신분질서인 氏姓制를 설명하고 4~5세기에畿内를 중심으로 축조되는 거대고분과 그 부장품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해외로부터 도래

25) 4~6세기의 지역국가론에 대해서는 門脇禎二, 2003 《日本古代の地域王國とヤマト王國》 上・下 (學生社) 참조.

인의 서술이 본격화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임나일본부로 대표되는 고대일본의 한반도 지배론은 戰前의 이해가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그대로 이어진다.

넷째, 隋唐帝國의 출현과 동아시아의 변동을 주제로 하는 서술이 많아진다. 건수사, 건당사의 파견과 일본 고대사상에서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聖德太子의 역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의 서술에서 중국 중심의 서술체계는 일본고대사 서술의 중요 특징이고 변함없이 전개된다. 이어 대화개신으로부터 율령국가가 성립되는 7세기말까지의 정치사 중심의 서술이다. 飛鳥시대 전반의 蘇我氏의 권력으로부터 왕족중심의 왕권의 성립과정, 백촌강 전투, 天武, 持統朝의 정치와 문화의 서술이다.

다섯째, 천황제 율령국가가 성립하는 8세기 奈良時代의 서술로 이어진다. 일본고대의 마지막 시대인 平安朝는 9세기말에서 12세기말까지의 4백여 년간으로 구분하고 있어 한국사의 시대구분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발전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체계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전체적인 틀은 커다란 문제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본열도 통일론 시기, 대외관계사의 서술이나 시각에서는 일본적 관점과 인식이 과도하게 나타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엿보인다. 일본고대사에서 대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

4~5세기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 大和분지에서 출현한 권력이 주변세력과의 연합, 동맹 등 정치적 상하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열도의 맹주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대화정권이라 불리는 왕권의 발전사이다. 1951년판 《中學日本史》(坂本太郎·家永三郎編, 學校圖書株式會社)를 보면, <대화조정의 발전>에서 “2~3세기에 주변국을 통합해서 4세기에는 일본열도의 대부분을 통일했다”고 한다. <半島の 진출>에서는 “국내를 통일한 대화조정은 조선반도에 진출”, “백제는 주변 2국에 압박받아 대화조정에 보호를 요청해서 조정은 백제를 구원하고”, “지금의 부산부근의 任那 지역에 대화조정은 日本府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지배하였다”라고 하고, <문화의 진보>에서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조선반도에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4세기대에 일본열도 통일론, 임나의 지배와 한반도에

대한 세력권 확보 등이 이 시기의 대화정권의 모습이다. 이러한 서술은 이 교과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동시기의 모든 교과서에 보이고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된다.

1955년 판 東京書籍 《新しい社會》에서도 “4세기에 들어가면 일본전토의 통일을 추진 … 동북지방, 구주남부를 제외한 전국통일”, “국토를 통일한 대화조정 of 세력은 조선에도 뻗쳐 4세기말경…일본은 백제, 신라를 복속시키고, … 임나에 日本府라는 관청을 설치해 통치하였다”라고 한다. 1965년 판 《中學校社會2・歴史》(坂本太郎 外, 학교도서 주식회사)에서는 “국내통일을 이룩한 대화조정은 4세기중엽이 지나면 조선남부에 진출해서 任那지역을 영지로 하고 4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백제, 신라를 종속시키고 더욱이 북의 고구려와 싸웠다”라고 한다. 1977년 판 大阪書籍(時野谷勝 外, 《中學校社會》 歴史的分野)에서도 “대화조정은 … 4세기중엽까지는 동북지방과 남구주를 제외하고는 일본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본고대사의 서술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후의 역사전개는 대화정권에 의한 내정과 외교의 독점적 장악체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통일적 고대국가를 완성하였다는 논리이다. 이 시점에서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광개토왕비문의 辛卯年기사의 一節이 전제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이 기사는 일본의 한반도침략기에 고대일본의 ‘南鮮經營論’의 근거가 되어 현실의 침략정책의 역사적 합리화에 일조하기도 했다. 즉 백제·신라 등 한반도남부를 지배할 정도라면 일본의 국내통일은 이미 완성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상이지만, 역사연구방법으로서는 앞뒤가 전도되어 있다. 또한 戰前の 국정교과서에 日本武尊에 의한 구주남단의 熊襲와 동북지방의 蝦夷를 정벌했다는 《일본서기》 景行紀를 인용한 서술이 있지만, 이 기사는 8세기 율령국가의 상황이 투영된 사실로서 강단사학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 게다가 《宋書》 왜국전에 왜왕 武의 국토정벌기사가 5세기후반대임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고고학적으로 小林行雄의 三角縁神獸鏡 연구도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說에 의하면 동일 주형으로 부터 구조된 同范鏡이 다수 존재하고, 西는 熊本縣으로부터 東은 群馬縣까지 약 300여 매가 발견되었다 한다. 그리고 이들 동범경이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현상은 畿内の 중추로부터 각 지역의 首長에게 일원적으로 사여된 결과이고, 32매 이상의 삼각연신수경이 출토된 京都府 椿井大塚山古墳의 수장이 그 주도적 배포자로서 추정했다.²⁶⁾ 요컨대 삼각연신수경을 통해 畿内の 왜왕권과 각 지역의

26) 小林行雄, 1961 《古墳時代の研究》(青木書店)

수장간의 지배·복속관계를 간취한다. 그러나 3세기대의 거울이 4세기대의 고분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기초적 사실에 대한 모순 등 반론이 강하고 특정 거울의 공유로부터 지역과 지역간의 지배·복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3. 5~6세기 국가체제와 서술의 문제점

4세기대 일본열도통일론과 임나일본부 문제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들어가면서이다. 일본열도 통일론에 대한 서술을 보면, 1981년판 大阪書籍(時野谷勝 외, 《中學社會》歷史的分野)의 <대왕과 각지의 왕>에서 “5세기 중엽까지는 대왕은 각지에 병력을 보내 지방의 왕을 복속시켰다. 이리하여 대왕하에 구주중부에서 관동까지의 지방의 왕이 연합을 만든 것이 일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 1987년 판·1997년 판 東京書籍(吉田孝 외, 《新編新しい社會歷史》)의 <고분의 출현과 대화국가>에서 “대화국가의 왕은 5세기대에는 구주에서 동북지방남부에 이르는 각지의 왕을 종속시켜 대왕이라 불리었다”라고 하고, 2002년·2006년 판 東京書籍(五味文彦 외, 《新編新しい社會歷史》)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 4세기대 일본열도 통일론이 1세기가 내려갔고 더구나 대화정권의 통일이 각지의 왕을 종속시켜 ‘연합’적인 성격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埼玉縣 稻荷山古墳에서 출토된 철검이 1978년에 보존 수리의 결과 獲加多支爾大王이라는 인물명이 발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명문은 熊本縣 江田船山古墳 출토의 大刀에 새겨진 獲□□□爾大王과 동일인물로 파악하고 《宋書》 왜국전의 상표문에 보이는 倭王武에 비정했다. 철검명에 보이는 辛亥年은 471년으로 대화정권의 獲加多支爾大王이 동으로는 관동지방, 서로는 구주지방까지 세력을 뻗친 것으로 보고, 《宋書》왜국전의 <東征毛人五十國 西服衆夷六十六國>의 국토통일기사와 대응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다.²⁷⁾ 이 가설은 일본학계의 통설로 자리잡고 5세기대의 일본열도 상황론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다. 2개의 금석문과 《송서》 왜국전의 왜왕무의 기사가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는 것도 1980년대 이후의 교과서의 특징이라 하겠

27) 井上光貞, 1980 <雄略朝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1986 《井上光貞著作集》 5 <鐵劍の銘文> <稻荷山鐵劍銘文考> (岩波書店); 岸俊男, 1984 <劃期としての雄略朝> 《日本政治社會史研究》 (塙書房); 同 1986 <古代の劃期雄略朝からの展望> 《古代の日本》 8 (中央公論社) 참조.

다. 獲加多支鹵大王에 대해서는 해당 고분이 고고학적으로 6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추정하여 신해년의 간지를 1運 내려서 53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통설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1975년판 清水書院(小葉田淳 外 《日本の歴史と世界》), 1977년판 大阪書籍(時野谷勝 外 《中學歴史2・歴史的分野》) 및 東京書籍(《新訂新しい社會》 歴史的分野)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살아진다. 사실상 대화정권의 한반도남부에 대한 복속과 지배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광개토왕비를 통해 한반도남부에 대한 지배설을 뒷받침하려는 서술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되고 광개토왕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교과서도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의 교과서에는 중학교교과서에서 현행 8종 중에서 7종이 광개토왕비분에 대한 기술이 모습을 감춘다.²⁸⁾ 유일하게 후소샤 판에서 광개토왕비의 사진과 신묘년조 기사의 탁본 및 현대어 해설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고대일본의 한반도지배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고 있다.

5세기대의 서술체계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왜의 5왕들이 한반도제국이 관칭된 작호를 宋 皇帝에 요청하는 기사이다. 임나일본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졌지만, 작호문제는 왜왕권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현행본인 東京書籍(《新編新しい社會歴史》)에서는 “대왕은 왜의 5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남부를 군사적으로 지휘하는 권리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중국의 남조에 때때로 사신을 보냈다”, 日本書籍新社(《中學社會・歴史的分野》)에서는 “5세기 왜국의 대왕은 5대에 걸쳐 중국의 송황제에 사자를 보냈다. 대왕은 왜국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남부를 지배하는 장군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힘썼다”, 日本文教出版(《中學生의 社會科・歴史》)에서는 “5세기에는 대왕은 조선반도의 남부를 지배하는 지위를 중국에 인정받으려고 했다”, 清水書院(《新中學校歴史》)에서는 “야마토왕권은 조선반도에의 진출을 피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황제에의 사신을 몇 차례나 보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5세기대의 왜왕들이 한반도남부의 諸國名이 관칭된 작호를 송황제에 수여해 줄 것을 요망하여 결국에는 그 뜻을 성취한다. 그러나 宋朝에서 왜왕에게 부여한 것은 宋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들이며 송조의 영향력

28)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最新日本史》(明成社)를 제외하고는 현행 11종 모두 광개토왕비에 대한 사진, 해설, 각주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 등 한반도지배설을 증명하는 사료가 아닌 고구려와 왜의 전쟁,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적 공격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미치지 않는 명목적인 작호였다. 478년의 왜왕 武 때 송조와 책봉관계에 있던 백제를 작호중에 넣어 왜왕의 요청을 승인했지만, 당시 송조는 왕조말기의 망국의 시기였던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²⁹⁾ 게다가 중국왕조에 보내는 상표문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상대국에 대한 우월적 입장을 주장하는 언사가 종종 들어가고 있어 주관적인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대화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 부분에 있어 일본 역사교과서는 이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의 중심은 대화정권이지만 이 시기에 대화정권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고 北九州의 筑紫를 비롯하여 吉備, 出雲, 毛野 등 지역정권의 주장들의 존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6세기대의 구주중북부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磐井은 527년 신라와의 외교교섭을 진행하면서 2년간이나 대화정권과 전쟁을 벌였던 세력이기도 하였다. 磐井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九州와 대화정권과의 전쟁은 국토통일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반정의 입장에서 보면 구주독립전쟁으로 일본 고대국가 성립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³⁰⁾ 대화정권의 북구주에 대한 지배권 확립은 대외교섭권의 독점이고 일본열도 내의 맹주적 지위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였다. 하지만 반정의 난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1개사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에는 거의 대부분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대화정권의 통일과정에서 필히 언급되어야 내용이 고등학교용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율령국가의 형성과 대외관계 서술

일본고대사 서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聖德太子, 大化改新, 遣唐使에 대한 서술이다. 1998년 중학교학습지도요령 및 그 해설서에 “성덕태자의 정치와 대화개신, 율령국가의 확립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련을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율령국가로서 형성되어 가도록 한다”라고 하고, 2008년의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도 ‘聖德太子의 정치, 大化改新’을 ‘율령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여 고대국가의 형성

29) 拙稿, 1998 <倭의 五王時代の 對外關係>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참조.

30) 磐井의 亂을 대화정권의 통일국가구상과 반정의 九州獨立國家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연구는 山尾幸久, 1985 <文獻から見た磐井の亂> 《古代最大の内戦磐井の亂》 (大和書房); 同 1999 《筑紫君磐井の戦争》 (人文書院) 참조.

과 성립과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교과서는 성덕태자의 치적인 관위 12계의 제정, 헌법 17조의 반포를 예외 없이 언급하고, 推古朝 때 섭정으로서의 국내외의 정치와 외교를 주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성덕태자에 대한 《일본서기》 등은 후대에 신격화, 신앙화된 전승기록으로 편집되어 실제설을 부정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³¹⁾

大化改新의 條文은 大寶律令의 모방이고 《일본서기》 편찬시의 개찬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성덕태자와 대화개신을 강조하는 것은 성덕태자의 善政과 당시의 유력호족이었던 蘇我氏의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대비시키고, 소아씨 타도하여 왕족중심의 정치체제의 구축이 대화개신이고, 천황제 율령국가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성덕태자를 비롯한 당시의 왕들이 소아씨의 꾀를 받지 않은 자가 없고, 아스카시대 전반기는 소아씨의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권을 장악한 ‘惡政’으로서의 蘇我氏를 제거하는 대화개신의 정당성이 대비되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소아씨에 대한 서술은 천황중심사관의 희생물로 처리되어졌다는 느낌이다.³²⁾ 견당사의 문제는 일본고대 율령국가의 성립과 불가분의 관련 하에서 연구되고 있다. 견당사가 가져온 중국의 제도와 사상은 천황제율령국가의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당사와 함께 언급되어야 할 대상이 신라와 일본을 오고간 수많은 사신들의 교류이다. 통일신라 이후 100여년간 양국을 왕래한 사신의 수는 일본에서 신라에 파견된 遣新羅使가 26회, 신라의 遣日本使는 47회, 그리고 전시기에 걸친 신라의 견당사는 170여회가 넘는다. 이에 반해서 동 시기 일본의 遣唐使는 7회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일본율령국가 수립기에 해당하는 7세기 후반 30여 년간은 한 번도 파견되지 않았다. 견당사가 파견되지 않았던 공백기에 동아시아 정보의 대부분은 신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³⁾ 사신의 왕래는 의례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많은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신라의 선진적 문물이 일본으로 왕성하게 유입되었다. 나라시대 일본의 관청에서 신라

31) 大山誠一, 1999 《聖德太子の誕生》(吉川弘文館) 참조.

3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집필한 扶桑社版, 自由社版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성덕태자에 관한 서술은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일본 우익 교과서의 성덕태자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는 拙稿, 2009 <신편 새로운 歴史教科書の 歴史觀과 향후의 전망> 《역사교육논집》 43 및 李在碩, 2009 <새역사의 일본고대사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 《韓日關係史研究》 33 참조.

33) 拙稿, 2003 <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 《古代韓日交流史》(혜안); 鈴木靖民, 2008 <日本律令の成立と新羅> 《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山川出版社); 同, 2007 <古代東アジアのなかの日本と新羅>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참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물품명세서인 <買新羅物解> 등에 보이는 수많은 신라물의 존재와 正倉院의 소장품은 당시의 양국의 교역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⁴⁾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도외시 하고 교과서 서술에서 신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극히 편협된 중국중심사관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戰後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어 日本古代史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V. 결어

일본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 천황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도작문화, 전방후원분, 광개토왕비문, <송서> 왜국전, 稻荷山古墳 출토의 철검명, 임나일본부설, 성덕태자, 대화개신, 견당사, 울령국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일본 고대문헌에 한반도 등지로부터의 인간의 이주 전승을 갖는 수많은 씨족들, 이들의 일본 고대국가 형성과정에서의 활약상 등 일본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도래인은 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일본의 고대문헌에는 이들 이주민들을 단지 일본 고대왕권에 봉사하는 귀화인으로 위치시켜 놓았다. 일본고대 지배층이 인식하고자 했던 귀화인이란 근대적 개념의 국적의 변경이 아니라 왕권의 포용과 德化를 전제로 한다. 고대의 일본왕권은 이들의 본적지를 蕃國으로 보는 8세기 천황제 울령국가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굴절된 渡來人像을 만들어 냈다. 근대에 들어서는 日鮮同祖論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학설도 있었지만, 민족문제로서의 도래인을 거론한 것은 연구사적으로 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

도래인 문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戰前의 귀화인사관으로부터 벗어나 日本古代史上에 있어서 도래인의 위치를 바르게 정립시키려는 학문적 흐름 속에서 나왔다. 도래인은 곧 일본인이라는 명제하에 민족문제로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에서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론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서도 도래인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관심은 민족문제로서가 아니라 일본 고대왕권에 포섭된 존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

34) 東野治之, 1992 <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 《遣唐使と正倉院》(岩波書店); 鈴木靖民, 1985 <正倉院の新羅文物> 《古代對外關係史研究》(吉川弘文館) 참조.

만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일본열도로 이주하여 세대를 이어가며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枝族을 분파시켰다. 고대 일본민족 중의 3할 이상은 도래인이었고 이들과 혼혈된 주민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차별화된 이민족으로서의 귀화인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요 구성원이자 동시에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한 개척자로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천황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안이자 현재 진행형이다. 천황의 권력은 武家시대의 장기간 공백은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씨족이 제도사적으로 천 수백 연간 존속한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점에서 천황과 그 제도는 일본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가 되고 있다. 고대의 정치형태인 천황제는 근대에 소생되어 국민 의식화와 교화의 수단이자 상징으로 교과서 서술의 중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황국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난 戰後에는 천황 그 자체를 중심에 두는 교과서는 살아졌지만, 전방후원분이라는 거대고분은 천황과 그 권력의 표상으로서 나타난다. 고분을 통해 표출되는 대화정권 중심서술은 천황가의 절대성과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고대사 서술의 정형화된 서술체계로 위치되어 있는 거대고분은 ‘천황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 연구자도 들어갈 수 없는 금족의 지역으로 되어 있다. 특정의 대상에 집중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역사서술은 오히려 역사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인위적으로 성역화, 신비화된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해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고대사의 서술체계에서 대외관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970년대 전반까지 전통적 학설에 의거하여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에 서술한 것은 일본고대사 연구의 가장 큰 편견이자 오류였다. 교과서의 단골 메뉴였던 광개토왕비문이 1980년대 이후 중학교 교과서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것도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였다. 반면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任那4縣이 대화정권의 지배 하에 있었듯이 《일본서기》의 기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중학교교과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⁵⁾ 고등학교 교과서의 시대착오적인 서술로써 변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성덕태자에 대한 기술은 7세기 전반 내정과 외교를 주도한 ‘왕족’으로서 인물상이 강조되어 있다. 아스카시대 전반기 성덕태자의 존재는 천황가의 권력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당시의 권력을 주도했던 소아씨의 모습은 ‘惡政’의 인물로서 이 씨족의 멸망은 정당성이 부

35) 현행 11종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 중에서 任那4縣을 백제에게 할양했다고 하여 대화정권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듯이 서술한 교과서는 《新日本史》(山川出版社), 《高校日本史B》(實教出版社), 《新日本史B》(桐原出版社), 《最新日本史》(明成社) 등이다.

여된다. 상대적으로 성덕태자는 ‘善政’의 이미지로 연출되고 그의 정치이념은 대화개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체계를 이루고 있다. 성덕태자는 후대의 신앙화된 측면이 강하고 실제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어 고정화되어 버린 성덕태자의 실체와 서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시되어 온 견당사 서술과 함께 신라와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중국중심사관에 빠져 신라에 대한 서술의 기피현상은 역사의 실상을 호도시키는 태도로 금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戰後의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황과 천황가의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21세기의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실체가 공존하는 새로운 日本古代史像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평문]

기무라 간(木村幹)

연민수의 <日本歷史教科書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이하, 연민수 논문이라고 한다)는 주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도래인, 천황, 고대사 전반에 걸친 서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연민수 논문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이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교과서까지도 고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논문은 현행 교과서의 기술 문제만이 아니라 위 항목에 대한 교과서 기술의 변천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이하 이 논문이 지적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검토하겠다.

연민수 논문의 주된 지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래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문화사적 의의 중심의 서술에 대해 도래인의 ‘일본 고대 왕권에 포섭된 존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일본민족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한 개척자’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천황 관련 서술에 대해서는, ‘4~6세기의 기나이(畿内)의 고분을 후대의 천황의 이미지로 연상시키는 수법에서 벗어나’, 종래의 기나이 고분을 근거로 하는 야마토(大和) 정권 중심의 설명이 아니라 지방 정권 등도 바탕으로 하여서 논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셋째 고대사 전반에 걸친 서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문제점은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부에는 ‘일본적 관점과 인식이 과도하게 나타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엿보인다’고 하며, 《宋書》 倭國傳 등에 근거한 倭 五王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대화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하고, 야마토(大和) 정권의 ‘일본 열도내의 맹주적 지위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와이(磐井)의 난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하였다. 또 나라(奈良) 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견당사(遣唐使)만이 중시되고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신라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극히 편협된 중국 중심사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가차 없이 비판한다.

이들 지적 속에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연구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고대 일본의 대외 관계에서 견당사 중시, 對신라 관계 경시에 대한 비판

등은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 모두가 신라와의 관계를 기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中學生の社會科 歴史》(日本文教出版, 2005년 검정)에서는 ‘대륙과의 연결’이라는 그림에서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일본은 唐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신라와 발해와도 왕성하게 교류하였다’고 설명하여 신라·발해와의 교류를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도 같은 그림에서 발해·일본의 향로가 표시되어 있지만 신라와의 향로는 보이지 않아서 설명문과 그림이 부합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에서 견당사는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 비해 신라·발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견당사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는 고대 일본 국가 형성에서 견당사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일본)·신라 양국 간의 사절의 왕래도 꽤 여러 차례에 이르고 正倉院에도 신라로부터의 전래 문물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자면 신라와의 관계도 또한 경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것은, 明治期 일본과 서양의 관계가 고대 일본 열도의 왕권과 중국 왕조의 관계에 투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 이후 견당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동아시아 교류의 실상이 감추어져 버렸다고 하는 李成市씨의 지적이다[《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青木書店, 1997)]. 현재 일본·신라, 일본·발해 관계도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학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하면, 연민수 논문에서 지적된 고대 일본의 대외관계사에서 일본·신라 관계 경시의 서술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민수 논문의 지적에 대해 의문점도 없지는 않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의 비판적 지적이 실제 중학 교과서 서술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구체적 실현성을 지니는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민수씨는 이와이의 난을 중시하여 그것이 중학교 교과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확실히 이와이의 난이 일본 고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 때문에 연민수 논문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의 교과서에는 언급되는 데에 이르렀다. 다만, 그것이 중학교 교과서에 게재될지 여부는 고대사에서의 중요성도 관련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상의 문제, 교과서 분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나이 일변도적인 설명에 대해 지방 정권의 동향도 경시할 수 없다는 연민수 논문의 지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면 이와이의 난만이 아니라 기비(吉備), 계노(毛野) 등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등의 문제도 부상하게 되어, 본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나이에 대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은 아닐까. 거듭 말하자면, 전체적인 페이지 수의 증가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의해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 기술이 과도하게 상세해지게 된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연구자가 인식하는 일본 고대사의 중요 사건은 꽤 많은 수에 이르고, 그들 대다수를 중학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논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일텐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중학교 교과서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과연 어디까지 설득력 있는 비판인가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으로 지적된 것 중에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별 구체적 기술이 상정하기 곤란한 점이다. 예를 들어 倭王武의 외교에 대해서 ‘주관적인 외교적 수사를 근거로 大和정권의 대외관계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며, 그에 대해 ‘일본역사교과서는 이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확실히 그 사료적 근거가 되는 《宋書》 倭國傳의 倭王武의 上表文에는 文飾과 과장이 인정된다. 그러나 왜 왕권이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宋에 구한 것은 사료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각 교과서의 기술도 거기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해 연민수 논문에서는 위의 서술과 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연민수씨는 東京書籍·日本書籍·日本文教出版의 倭 五王의 대외 관계 기사에서 ‘가야지역에 대한 야마토정권의 정치, 군사적 세력권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비판하였는데(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韓國史研究》 129), 이러한 지적은 그와 같은 이해와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동 교과서의 서술로 보아서는 연민수씨와 같은 이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어느 기술, 어느 곳에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는지 해당 부분의 교과서 기술의 구체안을 함께 보여 준다면 이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여기까지 연민수 논문에 대해 비평하였는데, 여기에 논급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고대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어 일본 고대사의 연구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평자의 비평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차 말하였듯이 연민수 논문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생각할 때에도 경시할 수 없는 지적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비평문은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연구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

원인 기무라가 작성을 담당했다)

[집필자 답변]

기무라(木村) 위원의 비평문에서 “이들 지적 속에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을 연구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인정된다”, “연민수 논문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생각할 때에도 경시할 수 없는 지적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대체로 필자의 논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고대의 대외관계사에서 중국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신라와의 관계도 중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향후 일본 교과서 집필자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의 접근을 기대하고 싶다.

몇 가지 지적도 나왔다. 일본 고대의 국토통일과정에서 나온 이와이(磐井)의 난에 대한 중학교교과서에서의 서술의 누락을 지적한 것에 대해, “그것이 중학 교과서에 게재될지 여부는 고대사에서의 중요성도 관련되지만 중학 교육과정상의 문제, 교과서 분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중학 교과서의 역사 기술이 과도하게 상세해지게 된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에당초 연구자가 인식하는 일본 고대사의 중요 사건은 꽤 많은 수에 이르고, 그들 대다수를 중학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라고 하였다. 磐井의 난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기술이 없다. 물론 교과서의 분량, 기술적인 문제, 과도하게 상세해지는 위험성도 있지만, 이 사건이 기나이(畿内) 정권의 전국통일의 제1보라는 점에서 서술해야 옳다. 이것이 고등학교에 앞서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도하게 상세’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중학교에서 안 가르칠 이유도 없고, 복잡해 질 것도 없다. 내용이 상세할 필요도 없고 야마토정권의 통일과정 속에서 몇 줄 정도 간단히 언급되면 족하다. 교과서 집필자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고대사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 검토해 봐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宋書》倭國傳의 倭王武의 上表文中에서 왜왕들이 송 황제에 요청한 한반도 諸國名이 冠稱된 작호에 대해 “왜 왕권이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宋에 구한 것은 사료적

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각 교과서의 기술도 거기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송서 왜국전은 당대의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문의 특성상 과장이나 허위정보의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왕의 일방적 주장과 현실성 없는 기대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표문은 중국과 통교하고 있던 동아시아제국에서 종종 발견된다. 또한 작호가 갖는 현실적 효용성은 전혀 없다. 왜왕이 요청한 작호에 보이는 한반도 제국명은 송과는 통교가 없는 지역이고, 백제는 송의 책봉체제하에 들어있어 불허하였다. 게다가 백제가 송으로부터 받고있던 鐵東大將軍은 왜왕이 宋에 요청한 安東大將軍보다 상위의 장군호로서 왜왕이 군사권을 요청한 내용과 모순된다. 한편 백제 동성왕대에 중국의 남제에 대해 北魏의 관할권내에 있던 지역의 장군과 태수직을 요청하여 수락받은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지역이 백제의 관할 지역 내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며 백제의 통치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당시 왜왕이 기대했던 것은 군사적 지배권이 아니며 고구려의 세력권내에 있던, 고구려의 군사적 공격에 의해 피해를 본 지역과의 정상적인 통교였다. 특히 왜왕들은 백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백제공격에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상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면적 사료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한 사료해석이다. 4-5세기 단계에서 왜왕권이 한반도를 지배할 군사적인 힘이나 계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로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신묘년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의 연구 성과는 어떠한지 참고하기 바란다. 사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고대 사료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느낄 것이다. 이 시기에 과연 왜왕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시 왜왕권이 처해있던 국내적 상황, 국제환경 등 커다란 시야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연민수, 1998 <왜의 오왕시대의 대외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참조]

끝으로 일본 고대국가 통일의 시기론에 대한 필자의 지적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일본고대사 연구자 쪽에서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4세기대 통일론, 5세기대 통일론의 서술과 변화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에도 이점이 분명하지 않아 교과서 집필시 참고해야 할 문제이다.